

## 18차 3중전회 분석

2013년 제6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18차 3중전회 분석
2. 일 시 : 2013. 11. 20(수) 16:00~18:00
3. 발표자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허판(何帆) 부소장

### 1. 3중전회의 의미 및 시대적 배경

가. 3중전회란?

□ 1~7중 전회 중 가장 중요한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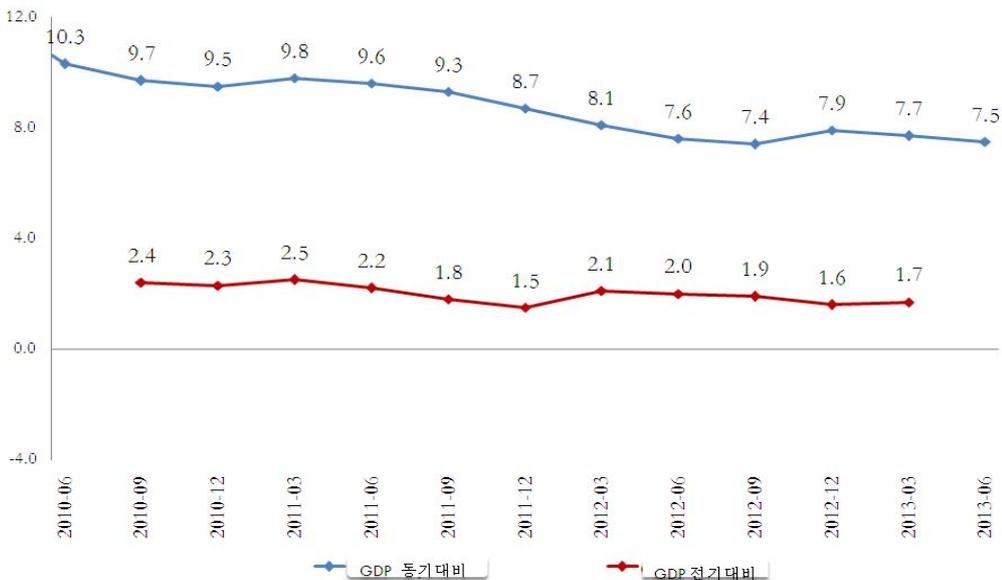
- 1중전회: 당내부 지도자 확정
- 2중전회: 새정부 지도자 확정
- 3중전회: 새정부 정책시행 강요 확정
- 4중전회: 군사 인사에 대한 중대한 조정
- 5중전회: 5년 계획 제정
- 6중전회: 정신문명 강조
- 7중전회: 새로운 당중앙 선거를 위해 준비

### 역대 3중대회 주요의제

	주요의제
11차 3중대회 (1978년 12월 18~ 22일)	혼란상태를 수습하여 바로잡고, 당의 업무중점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
12차 3중대회 (1984년 10월 20일)	“중공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채택, 농촌에서 도시와 전체 경제분야로 개혁 확대
13차 3중대회 (1988년 9월 26~ 30일)	“가격, 임금 개혁에 대한 초보방안” 및 “중공중앙의 기업 사상정치 강화와 개선에 관한 통지” 채택, 경제환경 정비, 경제질서 정돈, 개혁 전면 심화
14차 3중대회 (1993년 11월 11~ 14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에 따른 몇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 채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 전면 배치
15차 3중대회 (1998년 10월 12~ 14일)	“중공중앙의 농업, 농촌사업에 따른 몇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 채택, 2010년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 제출
16차 3중대회 (2003년 10월 11~ 14일)	“중공중앙의 시장경제체제 완성에 따른 몇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 채택, 처음으로 상세한 과학발전관과 “5개 총괄” 발전목표 논술
17차 3중대회 (2008년 10월 9~ 12일)	“중공중앙의 농촌개혁 추진에 따른 몇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채택,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추진 가속화 및 도농간 통합발전 추진 제출

### 나. 3중대회의 시대적 배경

중국 경제성장 둔화



## □ 중진국 함정 방지

- 환경 및 자원제약
- 소득분배 격차 확대
- 사회 불공정 현상 심각

## □ 5세대 지도자

- 1세대 및 2세대 지도자: 마오쩌둥(毛泽东)과 덩샤오핑(邓小平)
- 3세대 및 4세대 지도자: 장쩌민(江泽民)과 후진타오(胡锦涛)
- 5세대 지도자: 시진핑(习近平)
- 5세대 지도자와 과거 지도자와의 차이점:
  - 1세대와 2세대 지도자는 혁명가로서, 혁명을 통해 지도자 지위를 확보하였음.
  - 3세대와 4세대 지도자는 2세대 지도자가 지정한 후계자임.
  - 5세대 지도자는 후계자 지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5세대 지도자는 경제문제보다는 정치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퇴출, 시진핑 시대의 도래(退出江湖, 认真学习)

## 2. 결의에 대한 분석

### 가. 초안작성 및 수정

□ 시진핑(习近平), 리우원산(刘云山), 장가오리(张高丽)가 담당

□ 각계 의견 수렴

- 변화만 제시할 뿐 발전은 제시하지 않음.
- 개혁 완화 및 약화 관련 의견은 접수하지 않음.

### 나. 공고 및 결의

## □ 총 목표

- 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도 완성과 발전, 국가 관리시스템과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
  - 즉 서방국가의 길은 견지 않을 것이지만, 서방국가의 우수한 경험은 도입하여 활용할 것임.

## □ 육위일체(六位一体)

-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태, 당건설

## □ 결의의 중점

- 전면적 개혁심화의 중점인 경제체제 개혁 및 그 핵심인 정부와 시장 관계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자원배치를 시장이 결정하는 메커니즘 구축 및 정부역할이 더 잘 발휘되도록 함.

## □ 추진 경로

- 대담, 안정,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 및 실천 중에서의 방법 모색과 경험누적(摸着石头过河)을 결합시킴.
  -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상관없이 쥐를 잡는 한 훌륭한 고양이"라는 관점을 최초로 제출한 덩샤오핑의 정책을 연상케 함.
  - 새지도부는 과거의 지도부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긴박감을 느끼고 있음.

## □ 결의에 대한 평가

- 외부에서는 이번 결의에 대해 푸틴과 레이건의 결합, 즉 집권적인 정치와 자유화된 경제라고 평가
- 발표자 개인의 소견에는 경제 면에서 싱가포르 모델에 더 접근한다고 판단됨.
  -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은 많이 감소되겠지만 통제는 여전히 있을 것임.
- 2020년이 되면 중요한 분야와 핵심단계의 개혁은 결정적 성과를 취득할 것으로 전망됨.

## 다. 결의내용

## □ 기본 경제제도 견지 및 완성

- 공유제 경제재산권 불가침, 비공유제 경제재산권 역시 불가침
- 혼합소유제 경제를 적극 추진(지분 교차소유, 직원 지분소유, 국유자본 운영사 설립)
- 국유자본 수익에 대한 공공재정 납부비율 향상 조정(2020년까지 30%로 인상)
-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 싱가포르의 테마세크(Temasek)와 유사함으로써, 정부는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유기업을 통제할 것임.
  - 기존의 중앙회금투자공사(Central Huijin Investment)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규모상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이런 개혁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현재 정부는 국유기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투자펀드 등 형식을 통해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경우, 국유기업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비국유경제: 은폐된 장벽 해소, 특허경영 분야에 진입,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

## □ 현대 시장시스템 완성 가속화

- 네거티브 리스트와 설립 전 내국민대우
  - 올 여름 중미 전략 경제대화에서 중국은 미국에 네거티브 리스트와 진입 전 내국민대우를 승낙하였음.
  - 중국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현할 경우 중국 기존의 경제관리체제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임.
  -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확실치가 않음.
  - 네거티브 리스트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원인 중의 하나임. 즉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대한 시범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운영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임.
- 가격개혁: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경우, 전적으로 시장이 결정, 정부의 부당한 간섭 철폐
- 도농간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 건설(농촌 집체경영, 건설용지의 동등한 시장진입, 동등한 권리와 가격)
  - 경제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개혁임.
- 금융시장 시스템 완성(민간은행, 주식발행 등록제도, 포괄금융(inclusive finance); 환율개혁, 금리개혁; 자본계정의 태환; 예금보험제도, 퇴출 메커니즘)
  - 금융분야에 대한 개혁은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고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내용임.
  - 이중 주식발행의 등록제도는 아마 향후 중국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 체제 개혁 심화(지적재산권 법원, 과학연구, 원사(院士))

## □ 정부기능 전환 가속화

- 거시조정 시스템 건전화(전망성, 적확성과 협동성; 국제 거시경제 정책 조율메커니즘, 심사비준 감소; 생산과잉 방지와 해소 관련 장기적 메커니즘)
  - 정부는 더 이상 경기부양책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을 의미함.
- 발전성과 심사평가 시스템 완성(단순히 경제성장 속도를 통한 성과평가 경향 바로잡기, 전국 및 지방의 대차대조표 작성)
  - 경제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생태건설, 생산과잉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평가를 통해 부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는 향후 중국의 정부관원은 리스크가 상당히 큰 직업이 될 것임을 의미함.
- 정부기능을 전면적으로 정확히 시행(심사비준 감소, 정부구입 서비스 확대)
  - 기업은 정부조달 서비스 확대 개혁에 유의해야 함.
  - 즉 정부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서비스 공급을 더 확대시킬 것임.
  - 일례로 정부가 보장성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정부는 자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상을 통해 건설한 후 정부가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관의 분류개혁 가속화
- 정부 조직구조 최적화(대부분 제도(大部門制), 행정구획 설치 최적화, 성(省)에서 직접 현(縣)을 관할

## □ 조세와 재정체제 개혁 심화

- 예산관리 체제 개선(지출예산, 이월예산 균형, 채무리스크 경보, 일반적 이전지출 증가 메커니즘 완성)
- 조세제도 완성(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자원세, 환경세, 조세우대정책 정리 및 규범화)
  - 중앙과 지방 간의 세수지출에 있어서 중앙재정은 수입이 많지만 지출이 적은 반면에 지방재정은 수입이 적지만 지출이 많은 특징을 가짐.
  -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토지매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오다가, 중앙에서 토지매각을 반대하자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무가 발생
  - 지방정부의 수입증가를 위해 소비세, 부동산세, 자원세, 환경세를 지방조세로 귀속시키고 이와 동시에 지방의 재정지출을 가능한 감소시켜야 하는바, 이는 중요한 개혁방향임.
- 직권과 지출책임이 서로 어울리는 제도 구축

## □ 도농간 통합 발전 메커니즘의 건전화

-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발표하였던 신형 도시화보다 더 중요한 개혁 내용임.
  - 신형 도시화는 주로 호적제도 개혁 등을 비롯한 도시에 대한 개혁이지만, 도농 통합 발전은 도시의 문제는 농촌에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임.
- 신형 농촌경영 시스템 구축 가속화(도급한 토지에 대한 농민의 점유, 사용, 수익, 거래, 도급경영권의 저당 및 담보권리 부여)
- 농민에 대해 더욱 많은 재산권리 부여(집체자산, 주택용지의 용익권, 농촌재산권 거래시장)
- 도농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치 추진(농민공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도농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추진)
-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 체제와 메커니즘 완성(대중소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지방채권 발행 허가, 읍(鎮)의 관리권, 호적제도 개혁, 읍과 소도시의 호적제한 전면 개방, 중등도시 호적제한의 질서있는 개방, 대도시 호적제한의 합리적 확정, 특대도시의 인구규모 엄격히 통제)
-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정체되었던 개혁의 결단을 내린 두 번째 토지혁명이라고 할 수 있음.

#### □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 투자진입 제한 완화(어린이 양육과 노인부양, 건축설계, 회계심사, 상업무역 물류, 전자상거래)
- 상하이 자유무역구(여건을 갖춘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자유무역구를 발전시킴)
- 해외투자, 투자협정
- FTA 건설의 가속화(글로벌화를 위한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지향)
  - TPP, RCEP 등을 포함함.
- 내륙 변경지역 개방(실크 로드, 해상 실크 로드)

#### □ 사회주의 민주정치 제도 건설 가속화

-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시대적 발전을 추진
- 민주적 협상의 광범한 다차원적인 제도화 발전을 추진
- 기초민주의 발전
- 여기서 확실한 것은 새지도부는 중국은 반드시 공산당이 집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음.

## □ 법치화 건설 추진

- 헌법 법률의 권위 유지 (법률 고문제도, 지방의 입법권리)
- 행정적 법집행 체제 개혁 심화
- 심판권과 검찰권의 법에 따른 독립적, 공정적 집행 확보(행정구획과 적절히 분리된 사법관리 제도)
  - 이는 아주 오래전 영국이 채택하였던 지방법원과 순회법원 형식을 연상케 함. 즉 지방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경우 순회법원을 통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사법관리 운영 메커니즘의 건전화
- 인권의 사법 보장제도 완성(노동교육 제도 폐지)

## □ 권력운용 제약과 감독관리 시스템 강화

- 권력을 제도적 제약 하에 둠.
- 과학적, 효과적인 권력제약과 조율메커니즘 형성(권력 리스트, 주요 지도자에 대한 제약과 감독관리 강화)
- 반부패 체제 메커니즘의 혁신과 제도보장 강화 (부패사건 조사는 상급 기율위원회 지도자 위주로 추진)
  - 왕치산(王岐山)이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로 당선된 후 기율위원회에 대한 외부의 이해를 증진시켰음.
  - 과거 부패사건은 동급의 당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방의 부패사건은 지방에서 감싸주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에 보고되기 어려웠음.
  - 새로운 개혁을 통해 지방의 부패사건은 직접 중앙에 보고할 수 있음.
  - 3중전회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분야가 바로 반부패일 것으로 예상됨.
- 작풍(作風, 업무분위기) 제도 개선의 건전화 (사풍(四風) : 관용차, 비서, 주택, 관저제도)

## □ 문화체제 메커니즘 혁신 추진

- 문화관리 체제 완성(네트워크)
  - 중국은 아직 완전한 언론자유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문화혁신은 사치라고 할 수 있음.
- 현대 문화시장 시스템 구축 및 건전화
-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문화의 개방수준 향상

## □ 사회 사업기관의 개혁 혁신 추진

- 교육분야의 종합개혁 심화 (국립학교 표준화 건설 및 교장과 교사의 교류/교체 제도 실시, 중점학교와 중점반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선택 난제 해결, 직업교육 시스템 건설 가속화, 대학입시 시험+평시 성적, 1년에 시험 수차 참가)
  - 교육시스템에 대한 개혁 중 교육의 균등화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취업과 창업 촉진체제 메커니즘의 건전화(실업보험제도, 사업 모니터링 통계)
-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소득분배 구조 형성(기업 임금에 대한 집체 협상제도, 자선사업)
-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보장제도 구축(점진적인 퇴직연령 연기, 주택 보장 및 공급 시스템, 노인서비스업)
- 의약위생 체제 개혁 심화(국립병원 개혁 가속화, 사회 병원 건설 권장, 의사의 복수 병원 진찰 허가, 민간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지정범위에 포함 허가)
  - 의료시스템 개혁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지만, 그 결과 역시 가장 실망스러웠음.
  - 의료개혁이 중요한 원인은 ▲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려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중국은 가전제품 등 상품 소비뿐만 아니라 의료 등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며, ▲ 의료분야를 비롯한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경우 더 많은 고용창출을 실현할 수 있으며, ▲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호감을 얻을 수 있으며, ▲ 중국은 다른 영역에서 모두 생산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유독 의료와 양로분야에서는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임.
- 계획출산 정책-단독 두 자녀(부부 중 한사람이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
  -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의 개혁에 대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였음. 기저귀나 피아노 관련 기업의 주가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피임약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였음.

## □ 사회관리 체제 혁신

- 사회 관리방식의 개선
- 사회 조직의 활성화
- 효과적인 사회모순 방지 및 해결 체제 혁신(법과 소송 관련 민원에 대한 법에 따른 완결제도 구축)
- 공공안전 시스템 건전화(네트워크 안전)
-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 결의 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임.
- 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안전문제를 담당할 것임.
- 미국의 국가안전위원회와 다른 점이라면, 미국은 국제안전을 더 중요시하지만, 중국은 국내안전에 포커스를 둘 것으로 판단됨.

#### □ 생태문명 건설 가속화

- 자연자원 자산소유권 제도와 용도관리 제도 건전화
- 생태보호 레드라인 확정
  - 거주와 농경 금지 지역을 확정함.
- 자원의 유상 사용 제도와 생태보상 제도 실시
- 생태환경 보호관리 체제 개혁
  - 과거의 행정적인 수단과 전혀 다른 시장방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다스릴 것임. 즉 오염을 시킨 주체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임.

#### □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

- 군대 체제편성 개혁 및 조정 심화
- 군대 정책제도 조정 및 개혁 추진(사관의 직업화, 군비관리, 군사법규)
  - 관련 개혁을 추진하는 원인은 군대내부의 부패문제, 군대 무능화 등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으로 판단됨.
- 군수산업과 민간경제 융합(军民融合)의 심층적인 발전 추진
  -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일종 조치로 판단됨.

#### □ 전면적 개혁심화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를 강화 및 개선

-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영도소조(领导小组)가 총 설계, 통합조율, 전반 추진, 실시 독촉을 담당
- 간부인사 제도 개혁(선임제와 위임제, 각 연령별 간부 활용, 다분야와 다지역 간부간 교류 강화)
- 군중노선(群众路线)

□ 결의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내용

-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
-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영도소조(领导小组)의 설립
- 중앙기술위원회에 대한 개혁

#### 마. 총결

□ 정치가 경제보다 중요함.

□ 경제면에서의 관심사항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임.

□ 동 결의는 장기적인 강요로써, 향후 10년 내지 더 긴 시간에 걸쳐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개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서는 안됨.

### 3. 전망

#### 가. 결의내용에 대한 주의사항

□ 공감을 기준으로

- 실사가 관건임: 세칙의 출범
- 권력집중을 통해 개혁 촉진
- 의식형태의 현지화
- 정치와 경제 방향의 불일치?(打左灯, 朝右转?: 좌회전 등을 켜고 우회전을 한다?)
  - 즉 정치면에서의 집권과 경제면에서의 간접적인 통제로 평가됨.

□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언급된 부분보다 더 중요?

- 부동산의 진퇴?

- 과거 부동산을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의미함.
-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산업정책보다는 사회정책으로 더 많이 고려할 것임.
- 정부의 관심사항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억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가격의 유지임.
- 고용창출 압박을 간과한 가능성
- 국제형세에 대한 인식
  - 앞으로 국제형세는 중국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 기업에게 유리한 소식

- 서비스업
- 독점 타파
- 정부를 위한 서비스
- 군수산업
- 새로운 소비층
  - 토지개혁이 추진되면 농촌에서 새로운 소비층이 부상할 것임.
- 환경보호 관련 산업
  - 단기적으로 산업 내에 버블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전망이 좋음.

#### □ 느린 변수(slow variable, 慢变量)가 중국경제의 미래를 결정

- 인구요인
  - 노령화 시대 및 성별비례는 향후 중국 사회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도시화
  - 일본, 한국, 대만은 도시화 과정에서 모두 대도시의 발전을 제약하려는 의향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대도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도시화는 중국의 발전추이라고 할 수 있음.
- 신기술 혁명
  - 향후 신기술 혁명이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판단됨.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과학자, 엔지니어가 많음.

- 지정학

## 나. 결의내용에 대한 대응

□ 조용(低调)

□ 대기(等待)

- 세척의 발표를 기다려야 함.

□ 공부(学习)

- 시진핑의 지도사상을 잘 파악해야 함.

□ 관망

### <질의·응답>

#### 질문 1.

이번 18차 3중전회가 폐막된 이후 언론에서는 리커창 총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음. 아울러 앞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신형 도시화보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이 제시한 도농 통합 발전을 강조하였는데 이번 3중전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실제적인 역할이 줄어들었는가?

#### 답변 1.

리커창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 사실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는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업이 다를 뿐이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비유하자면, 공산당의 총서기는 주식회사 이사회 이사에게 해당되고, 총리는 그 회사의 CEO에 해당됨. 즉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 질문 2.

국유기업과 공유제, 비국유기업과 비공유제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국유와 공유 및 비국유와 비공유는 같은 의미인가? 다를 경우 어떻게 구분하는가? 싱가포르의 테마세크와 유사한 국유자본 운영사 설립을 언급하셨는데, 지금도 중국경제의 대부분이 국유기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국영자본 운영사 설립은 새로운 분야에 국가자본이 투입된다거나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과연 어떤 형식으로 국유자본 운영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 답변 2.

국유와 공유는 서로 다른 개념임. 이중 국유기업이란 국가가 설립한 기업, 즉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공유제경제란 소유제 성격으로부터 볼 때 국가가 비교적 높은 지분을 소지한 형태를 말함. 즉 공유제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국가가 지분을 확보한 것임.

국유자본에 대한 운영사의 경우 기존의 유사한 기업보다 투자 범위가 훨씬 확대될 것이고 취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음. 향후 정부는 기업의 일상경영을 간섭하지 않는 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를 실현할 것임.

## 질문 3.

이번 3중전회에서 "국진민퇴(国进民退, 경제에서 국유부문(정부)의 비중 확대가 민간부문의 비중 축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나 "국퇴민진(国退民进, 경제에서 민간부문의 비중 확대가 국유부문(정부)의 비중 축소로 이어진다는 의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혼합 소유제 경제 적극 추진과 관련된 개혁 중에서 지분 교차소유,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이런 개혁조치를 국유자본 매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즉 국유자본 매각을 통해 지방채무를 상환하려는 것인가?

## 답변 3.

이번 3중전회에서 "국진민퇴"나 "국퇴민진"을 언급하지 않은 원인은 이 두 표현은 모두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대립되는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임. 현재 더 이상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경쟁관계를 강조하지 않으며, 이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모두 유리함.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은 더 이상 과거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관계를 가지게 될 것임. 광둥에 아주 많은 우수한 제조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은 테마세크 유형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음.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국유자본 매각을 통해 정부부채를 상환하려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중국의 정부부채는 대부분 지방부채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의 국유기업은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없음. 이 정책은 중앙의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중앙 국유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독점 타파를 위한 것임. 국유기업이나 비국유기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점이나 경쟁이냐가 중요함.